시민 민원 절반이 "도로·교통문제"

민선 6기 출범 이후 3060건 접수

불법 주·정차, 버스·택시 불친절 최다

광주시민의 민원 절반 이상이 '도로·교통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상에 제기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3060건 가운데 도로교통 관련 민원이 1537건으로 50.2%를 차지했다.

이 민원은 홈페이지 '장현C에게 바란다'와 '365생활민원센터' 등에 접수된 것이다.

시설과 건축이 576건(18.8%), 환경청소 409(13.4%), 문화관광 98건(3.2%), 생활경제 78건(2.6%), 보건복지 71건(2.3%) 등이다.

세부적으로 도로교통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412건(26.8%) 가장 많았으며 버스와 택시 불친절 397건(25.8%), 도로시설물 정비 265건(17.3%), 노면 및 지면보수 233건(15.2%), 버스노선 조정 122건(7.9%) 순이었다.

시설건축은 무허가 시설물 291건(50.5%), 불법 현수막 247건(42.9%), 기타(아파트 임대료 등) 38건이다.

환경청소 분야는 악취 172건(42.1%) 불법투기 169건(41.3%), 비행기와 아파트 층간소음 등 소음 68건(16.6%)이다.

시는 이번 민원 내용을 분석해 주정차 관리 및 주차시설 확충방안, 대중교통 서비스 및 친절문화 제고 방안, 보행하기 편한 가로 환경 조성 등의 기초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제기된 시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및 청원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앞으로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수립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머나먼 고향' 색소폰 연주

최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색소폰반 회원들이 '머나먼 고향'을 연주하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국선도 등 88종 217개반의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광주도시공사 '제10회 주거복지' 대통령상 수상

노후 임대주택 3500세대 환경개선사업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기여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주거복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주관하는 주거복지인 대회는 주거복지사업 개선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각 기관에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대통령상을 받은 도시공사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20억원을 들여 노후 영구임대주택 3500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왔다.

또한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치과 무료진료, 치매예방교육, 무료법률상담, 스케이트 무료강습, 프로야구 무료 관람, 사랑의 쌀 전달, 어린이 글짓기대회, 찾아가는 서비스, 무료 공부방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림마을 행복주택사업을 주거복지 우수사례로 발표해 국토부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6개 단지 5592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1200세대와 보금자리주택 120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 5개 자치구와 현안해결 머리 맞대

윤시장에 낸 시민 의견과 자치구 건의 사항 등 협의 시청서 대규모 토론회 열어

지난 1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와 자치구 간 대규모 간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상생을 화두로 내건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자치구 순방 때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의견과 자치구 건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간부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구 순방 때 받았던 시민 제안사항과 자치구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시 본청 일부 국장, 담당과장 17명, 5개 자치구 과장 28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현안해결을 위해 시와 자치구는 수시로 협의하고 있긴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시민 아이디어 64건 중 시와 자치구 논의가 필요한 23건과 5개 자치구청장과 윤장현 시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자치구 현안사항 35건 등 58건이 논의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아이디어와 건의사항에 대해 실현 가능 여부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견을 교환해왔다. 시는 토론회를 통해 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하고 이를 시행·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안전행정국장은 "과거에는 시에서 결정하면 자치구는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를 수평적 소통관계로 개선하자는 게 민선 6기의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함께 토론해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기분 자동차세 27만건 342억 부과

북구 104억 가장 많아… 31일까지 납부해야

광주시는 14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27만 건 3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의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3억원(11.3%)이 감소했으며 감소원인은 상반기에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북구가 1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89억원 ▲광산구 80억원 ▲남구 43억원 ▲동구 2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2기분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또한 광주시 지방세 ARS(1899-3888)납부시스템을 통해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진옥 광주시 세정담당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광주 동구청 세무과(608-3116), 서구청 (360-7531), 남구청(607-3141), 북구청(410-8155), 광산구청(960-8170) 등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